

# 李 대통령 “국민 삶에 도움되는 전략적 韓中 관계 기대”

##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 통화

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의지  
실질 성과 내는 전략관계 공감  
APEC 계기 시진핑 방한 제안  
한반도 평화 위한 中 역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



(왼쪽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 시진핑 중국 주석. /뉴시스

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



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은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통화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

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전날(9일) 이시바 총리와 전화 회담에 나섰다. 우리나라 주변국 4곳(미일중러) 중에서 미국·일본·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순서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화는 양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서, 양 정상 간 제반 사항이 조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中企 47% “자영업자 지원이 최우선 과제”

### 중기중앙회, 中企 300곳 대상 조사 李 정부에 내수 활성화 정책 촉구 공정거래·디지털 전환 등도 요구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꼽혔다. 새 정부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의견 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절반에 가까운 46.7%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꼽았다. 아울러 ▲공정·상생 거

래 환경 조성(35%)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및 탄소 중립 지원(22.7%) ▲연구개발(R&D) 확대 및 기술 보호 지원(22.0%)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중점 추진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68.9%로 중소기업 응답률(37.1%)보다 31.8%포인트(p) 높았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6%), ‘경제 성장 견인 능력’(41%),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39%),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극복’(23.3%)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 공약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가 1순위였다. 다음으로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 과제 입안과정에 중소

기업계 참여(18%)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 이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63%(매우 그렇다 23.7%+그렇다 39.3%)로 ‘그렇지 않다’(7%)보다 9배나 높았다. ‘보통이다’는 30%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하고, 804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경연, 통상·경제안보 대응 전략 제시

### 선진통상포럼과 세미나 개최

美 관세·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부처 간 통합 거버넌스 시급” 제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선진통상포럼과 함께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대미 통상 현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규범 등 통상 환경 전반에 걸친 복합 위기를 대응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인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tectonic shift)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

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대규 한경연 수석 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며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집중도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전 대사는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의 종합적인 정책 연계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서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OTT 시장 경쟁 실질적 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CJ이엔엠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한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39.0%, 티빙 26.8%, 웨이브 19.9% 순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결합상품 출시 시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정책대출 소득 기준, 1인 가구에 유리

### >> 1면 ‘주택 정책금융…’서 계속

버팀목대출은 1인 가구에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고,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정책금융상품은 1인 가구가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면 결혼에 따른 소득 기준 초과가 발생해도 대출을 중단하지 않는다. 주택 구매가 가능해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게 낫다는 분석도 나올 수 있는 것. 실제로 결혼을 고민 중이거

나 결정했다라도 주택 마련을 위해 결혼을 늦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했다는 한 30대 직장인은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구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적지 않다”면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맞벌이도 흔해지면서 신혼 가구의 소득이 늘고 있는데,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기준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